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394
----------	------

제 안 년 월 일 : 2025년 12월 22일
제 안 자 : 의료관광 특별위원장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의료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관광 비자 제도 경직,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문제,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규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 우려 등 주요 제도적 장애요인을 조속히 개선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의료관광 정책을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비자·의료·관광·숙박·교통을 연계한 원스톱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세계 의료관광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서울은 의료기술·인프라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제도의 경직성,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문제, 해외 의료광고 규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일몰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관광 산업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세계 의료관광 시장은 2032년 약 49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이다.

특히 서울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의 2배가 넘는 약 840만원에 달하며, 이는 숙박, 식음료, 쇼핑 등 도시 전반의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85.4%인 약 100만명이 서울을 방문할 정도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핵심 거점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는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관광객 3천만명 시대(서울관광 비전 3·3·7·7)’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자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립, 원스톱 비자 시스템 구축,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 간 간막이 행정과 낡은 규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서울이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관광 비자(C-3-3, G-1-10) 제도의 경직 문제다.

경쟁국들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부터 발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절차, 불명확한 심사 기준, 비자 거부 사유 비공개 등으로 인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 및 동반자에 대한 까다로운 자격 요건 또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브로커와 사무장 병원 문제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다.

우리나라의 현행 불법 브로커 신고 시스템은 실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여 실효성이 낮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사후관리가 부재하다. 말레이시아와 같이 익명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도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홍보를 가로막는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광고를 ‘공공의료 정보제공’으로 분류하여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의 의료광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일부 특례를 통해 공항·항만·면세점 등 특정 장소에 한해서는 외국어 광고가 허용되고 있지만, 온라인·해외시장 전반을 고려하면 여전히 제약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국가와 지자체가 인증한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의 길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일몰 우려 문제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제도 종료 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서울 의료관광 업계가 떠안게 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의료관광 산업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결림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의료관광 비자(C-3-3, G-1-10)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공개해야 하며, 환자 동반자 범위 확대 등 비자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라.

둘째, 정부는 건전한 의료관광 시장 조성을 위해 익명 신고제 도입 등 불법 브로커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홍보 경쟁력을 확보하라.

셋째,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라.

넷째,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의료관광 정책을 단일화된 창구

로 통합 관리하고, 비자·의료·관광·숙박·교통을 아우르는
‘원스톱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